

총파업특보 9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9월 20일



야수처림 장악했다 '3단계 MBC 파괴 공작' 실체 확인

치참하게 망가진 MBC는 MB시절 국정원의 작품으로 드러났다. MBC 파괴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담긴 국정원의 문건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2010년 3월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국정원장 지시로 만들어졌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 이 문서 13장으로 MBC는 철저히 장악됐고, 파괴됐다.

문서는 당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MBC를 바라보는 적나라한 시각으로 시작한다. '노조가 주인 행세하는 기형적 구조로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 온 MBC가 그들에겐 '기형'이고 '편파'였던 것이다.

문건에 나온 MBC 파괴 공작은 3단계에 걸쳐있다. 먼저 1단계는 사실상 인적 학살과 시사 프로그램 퇴출이다. 한 달 내에 지역사 사장들을 일괄

사퇴시키고, 좌편향된 국부장급 간부들을 전면 물갈이 하라고 지시했다. <PD수첩>과 <후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 갈라치면서 손 볼 것을 주문했다. 기자와 PD를 대폭 물갈이할 때, '국가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다. 이 '1단계 학살'은 실제 다 집행됐다. <관련 글 2면 3면>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2단계 노조 무력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경영권 침해 조항이 포함된 노사 간 단체 협약을 개정하고, 노조 불응 시 단협 해지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자행된 노조원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 부당 징계 등도 모두 국정원의 지시를 따른 결과였다. '건전한 노조 위원장이 당선되도록 측면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다. <관련 글 4면 5면>

3단계는 민영화다. 공영방송 MBC를 '끝내겠

다'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과 청와대가 MBC의 프로그램 개편, 인사, 노무, 채용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해 결국 공영성을 말살시키고, 시청률 시장에 내동댕이칠 요량이었다. <관련 글 6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즉각 이 국정원 문건이 MBC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이 국정원 지침대로 실행됐다. 순차적이지는 않더라도 각 단계가 혼재된 채 추진됐다. 일부는 실패했고, 단계별 시기를 넘기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 국정원 지침이 강제될 뿐 아니라, 김종국 안광환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거나,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국정원 MBC 파괴 공작이, MBC 내부자들에 의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가.

1단계 인사 학살... '큰집 조인트'로 시작



2010년 3월 2일 김재철은 MBC 사장 자리에 오른다. 사흘 뒤 김재철은 MBC 모든 관계사(계열사·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한다. 다시 사흘 뒤, 김재철은 19개 지역사와 9개 자회사, 총 28곳 중 22곳의 사장을 바꾸는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 당시엔 그저 '망나니' 같은 사장의 무자비한 칼춤 정도로 여겨졌다.

국정원 '지역사 사장 물갈이' 지침 김재철 즉시 실행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 기획이었다. 김재철 사장 취임에 맞춰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된 'MBC 정상화 방안' 문건을 보면, '지역사 사장

단 재신임 여부를 검토... 일괄 사퇴시켜 신입사장 친정체제 확립'이라고 이미 지침이 적시돼 있었던 것이다. 김재철은 국정원 지침의 충실한 실행자였다. 우연이 아니다. 인사 대상 7명의 실명도 이미 국정원 문건에 적시돼 있었다. 이름 옆에는 'BBK 왜곡보도 주도' '미디어법 과업 독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반대'와 같은 악평을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7인의 살생부'를 작성했던 것이다.

국·부장급 간부 '7인 살생부' 명단 작성

지역사 사장 다음은 국장·부장급 '간부'에 대한 물갈이였다. 이 역시 국정원은 7명을 꼽았다. 국정원은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면서 누구는 '친북좌파', 누구는 '손석희 비호', 또 누구에게겐 'PD수첩 감싸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었다. 학살 대상 간부 명단엔 당시 이우호 논설실장의 이름도 올랐다. 자타공인 다큐와 제작의 대가로 통했던 이우호 실장은 당시 'MBC의 독립성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글을 회사 게시판

에 쓴 지 넉 달 만에 실제로 논설위원실에서 특집TF팀으로 발령이 났다. 이우호 실장은 국정원 문건에 대해 "분노와 함께 실소가 나온다. 이런 짓까지 했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간부 살생부에 오른 또 다른 인사는 "노조, 반노조라는 성향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합리성과 비합리성,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 아닌가. 국정원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국정원 문건 작성 직후 '큰집 조인트 좌파 정리'

"김재철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MBC 내부 좌파 70~80%를 정리했다"고 당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폭로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은 그저 저급한 '비유'가 아닐까 의심도 들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신동아> 2010년 4월 호에 실렸고, 청와대까지 보고된 국정원 'MBC 장악 문건' 작성 직후다. 결국 김재철의 '큰집 조인트 인사'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김재철이 실행한 인사 학살임이 확인된 셈이다.

시사프로 파괴도 '국정원 지침'

<W> <후플러스> 퇴출에 <PD수첩> 압박

7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드디어 민낯을 드러냈다. 2010년 8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 사태. 같은 해 10월 있었던 <후플러스>와 <W> 폐지 등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파방송 주도 시사고발프로(PD수첩, MBC 스페셜, 후플러스, 시사매거진2580) 제작진 교체, 진행자·포맷·명칭 변경..."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中)

이 국정원 지침이 나오고 정확히 7개월 뒤 <후플러스>가 실제로 폐지됐다. 2006년 6월 첫 방

송을 시작해 175회에 걸쳐 우리 사회 권력층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해온 <후플러스>가 MBC 방송에서 사라진 것이다. <후플러스>는 국정원 문건 작성 직전인 2009년 11월 한 차례 명칭 변경 흥역을 치렀다. 사측이 전신 <뉴스후> 명칭 변경을 제작진의 거센 반발에도 몰아붙인 것이다. 그런데 <후플러스>로 이름을 바꾼 지 1년도 안돼선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

국정원 문건에선 언급이 안됐지만, 당시 경영진의 대표적인 눈엍가시 프로그램인 <W>도 함께 폐지됐다. 당시 사측이 내세운 폐지 이유는 '경쟁력 약화'였지만, 실제 이유는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였던 게 확인된 것이다.

"당장 폐지가 어려운 'PD수첩'의 경우 사전 심의 확행..."(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中)

2010년 8월 17일, 당시 사장이던 김재철은 당일 밤 11시 방송예정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느닷없이 사전시사를 요구했다. 사장이 특정 제작물을 그것도 사전에 시사하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제작물은 이미 심의국에 의해 사전 대본심의가 끝난 상태였고, 담당부장과 국장이 자체 시사를 통해 문

제없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김재철은 국정원 문건 지침에 따라 전례가 없는 사전심의를 시도했다. 제작진이 사전검열 논란과 방송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끝까지 거부하자 김재철은 결국 방송보류를 결정해 충격적인 불방사태를 초래했다. 안광한 당시 편성본부장 역시 "임원진의 시사 없이는 방송이 불가하다"며 김재철과 함께 불방을 밀어붙였다. 이후에도 <PD수첩>에 대한 아이템 검열과 사전 심의 등은 계속됐다. 'MB 무릎 기도 파문'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들이 실제로 불방되기도 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고 봤던 <PD수첩>에 대해선 국정원이 제작물 하나하나에 간섭과 검열을 지시했던 결과였다.



편파 · 왜곡 블랙리스트 “경악, 분노, 참담”

윤영욱 (2010년 6.2 지방선거방송기획단장)



**국정원
메 모** 4대강 꿈수라고 발언하는 등 좌파인사. 선거단장을 하며 박성제-유상하 등 극렬 노조원을 선거단원으로 발탁. 공정방송 의심 된다.

좌파성향, 이념편향이라는 국정원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 일을 위한 것이지 성향 반영해 구성원 선발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다. 자의적, 악의적, 정파적 해석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성제 (2010년 6.2 지방선거방송기획단)



**국정원
메 모** 좌파인사인 선거단장이 박성제 등 극렬 노조원을 선거단원으로 발탁했다. 공정방송 의심된다.

황당하고 화가 난다. 김재철과 백종문이 나를 노조 배후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누군가 국정원에 그런 정보를 흘려줬던 거다. 해고 뒤에는 한 케이블 방송사가 내게 기자들 교육을 요청했다가 ‘윗사람들의 지시’라며 취소한 적도 있다. 그것도 국정원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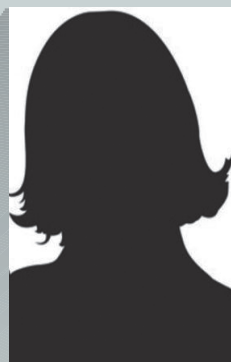
유상하 (2010년 6.2 지방선거방송기획단)



**국정원
메 모** 좌파인사인 선거단장이 유상하 등 극렬 노조원을 선거단원으로 발탁했다. 공정방송 의심된다.

내가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선거방송이 무슨 관계가 있다. 선거방송을 보면 알지만 특정 정파나 정당에게 유리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노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극렬 노조원’이란 단어를 넣은 것 자체가 어이없다.

김현정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작가)



**국정원
메 모** 김현정 등 좌편향 프로그램 작가는 좌파 인물 일소

굳이 나같은 프리랜서 작가까지 관리를 해야 하나. 작가로서 기자·피디들이 기획한대로 맞춰 일한 것뿐인데 황당하다. 그 당시 쓰고 싶은 내용을 못 쓴 건 없었다. 외압이 있었겠지만 피디들이 알아서 다 막아줬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일윤 (당시 진주 MBC 사장)



**국정원
메 모** 노무현 조문 부추기고 미디어법 파업 독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에서 취재인력이 많이 와 있어서 격려한 것인데 부추겼다고 보고를 한 모양이다. 파업도 미디어법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후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꼈고 관련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다. 다른 지역 MBC 사장들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면서 다들 그렇게 느꼈다.

유기철 (당시 대전 MBC 사장)



**국정원
메 모** 2007년 대선 당시 <2580> BBK 왜곡 주도

이명박 정부 초기 MBC를 오래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이 바뀌었다. 새로 온 정보관이 MBC에 대해 잘 모르니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거나 음해성 정보들을 취합한 거다. 나는 당시 전라도 출신, ‘좌빨’이라고 분류됐다고 들었다. 짐작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악스럽다.

이우호 (당시 논설위원)



**국정원
메 모** 6.25 남침유도설 언급 등 친북좌파

날조다. 비슷한 말을 한 적도 없다. 당시 경영진 어느 누구도 논설 내용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당시 방문진 김우룡 이사가 ‘MBC 논설위원들 이상하다’고 했더라. 내부에서 국정원에 정보를 전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다. MBC 적폐 청산에 내부 협력자 정리를 우선 순위에 올려야 한다. CIA가 미국 언론인들 사찰하나. 국격 떨어뜨리는 일이다.

김정수 (당시 원주 MBC 사장)



**국정원
메 모** 친노조, 대통령 라디오 연설 공공연히 반대

당시 MB가 ‘공영방송 라디오에 연설하겠다’고 해서 ‘KBS면 됐지 MBC까지 할 필요있나’하고 반대하긴 했다. 합리와 상식의 기준에서 결정한 것뿐이다. 친노조라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 이후 원주 MBC 사장 임기 3년을 마치지 못하고 1년 만에 미술센터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2단계 노조 말살, 단협 파괴부터 시작

김재철 “단협 개정하겠다” 노조 파괴 신호탄

국정원이 기획한 MBC 장악의 근원적인 조치는 노조 말살, 구체적인 수단은 단협 개정이었다. 그 실행의 첫 단추는 김재철 사장이었다. 2010년 2월 26일 김 전 사장은 면접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 뒤 MBC 사장으로 낙점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MBC 체질 개선 추진’을 지시한 2월 16일과 그 지시에 따라 ‘MBC 정상화 문건’이 보고된 3월 2일 사이의 일이었다.

전영배 “다른 쟁점 관심없어... 국장 책임제만 바꾸자”

그들이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국장 책임제’였다. 2010년 10월부터 석 달 간 이뤄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은 21조에 명시된 ‘국장 책임제’를 ‘본부장 책임제’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국장 책임제’가 회사의 경영권·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국정원 문건에 나오는 ‘경영권·인사권 침해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앵무새처럼 읊은 셈이다. 당시 사측 대표로 나온 전영배 기조실장은 “단체협약의 다른 쟁점들은 별 관심이 없고, 사소하다”며 “본부장 책임제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발언을 살펴보면 전영배 실장은 국장 책임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국정원 문건에 따라, ‘독소조항’이라 판단한 ‘국장 책임제’를 없애는 데 급급했고, 이 ‘오더’의 실행을 지상과제로 여긴 것이다.

왜 ‘국장 책임제’였나? 공정방송 최후의 보루

그동안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항상 ‘국장 책임제 폐지’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9월 ‘본부장 책임제’로 바뀌기 전 단체협약 21조는 ‘편성과 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국장 책임제는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는 문화방송의 소유 구조상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였다. 본부장에게 최종 권한이 부여될 경우, 어떻게든 정권이 방송 내용까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도 프로그램에는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다. 실제 <PD 수첩> ‘수십 6미터의 비밀’에 대해 김재철 전 사장의 ‘사전시사’ 요구를 제작진이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다음은 ‘공정방송’ 조항 트집 ... 단계적 파괴 공작

‘본부장 책임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던 2011년 1월, 사측은 느닷없이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중 보직변경 조항이 인사권 침해라며 억지를 부렸다. 당시 공방협 운영규정 제9조에 규정된 국장 신임투표와 제10조의 보직변경 조항을 없애는 다음 단계에 착수한 것이다. 국장 책임제 폐지로 방송 검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면, 공방협 무력화로 제작진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채널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이후 대응방식도 문건에 나타난 시나리오 그대로다. 국정원은 ‘노조 불응시 단협 해지를 통보,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계획을 세웠다. 사측은 국장 책임제 폐지와 공정방송 조항 수정을 요구하더니, 조합이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단협 파기를 통보했다.

이진숙 “공정방송 책임자는 사장(?)”

170일 파업 이후인 2012년 10월 17일 결국 단협은 해지된다. 무단협 상태로 국장 책임제와 공방협 조항 등 안전장치가 사라진 MBC의 공영성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조합은 20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단협 복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한결같이 ‘공정방송’ 조항을 문제삼았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결기만 느껴졌을 뿐, 논리는 허술하고 황당했다.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은 ‘공정방송의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어서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을 논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공정방송’은 노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이며 이를 논의할 단체협약 등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 건 사측의 ‘위법’이라는 게 170일 파업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MBC 정상화 전략’이라는 국정원 문건 몇 줄에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팔고 공영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린한 일당들은 이제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끝없는 징계 · 해고...국정원 기획이었다

끝없는 징계와 해고, 이 역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2010년 3월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보면 회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징계의 칼을 휘둘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MBC의 '당면과제'로 '노영방송 척결'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활동은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는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

첫 본보기는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다. 회사는 2010년 6월 그를 39일 파업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 또 그와 함께 노조집행부 등 47명을 중징계 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회사 안팎에서 동시에 국정원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것이다. 지역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7월 지역사 광역화에 반



대해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진주MBC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7명을 정직 처분했다. 국정원 문건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든 강력한 징계였다.

170일 파업 이후 해고 · 징계 피바람

2012년 170일 파업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는 피바람을 일으켰다. 박성호 기자회견(2012년 2월 29일), 이용마 홍보국장(3월 5일), 정영하 노조위원장(4월 2일), 강지웅 사무처장(4월 2일), 최승호 PD(6월 20일), 박성제 기자(6월 20

일)가 차례로 해고됐다. 국정원 시나리오대로 '영구 퇴출' 시킨 것이다. 백중문의 말처럼 아무런 증거 없이 최승호 · 박성제 조합원을 해고시킨 이유는 국정원의 문건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영구 퇴출을 통한 체질변화다. 국정원은 '세부 추진방안 2단계'로 MBC의 '체질변화 유도'를 목표로 삼았다.

2012년 12월엔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5년 7월 복귀했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두 번이나 더 내렸다. 권성민 PD 역시 2015년 1월 해고됐다.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해고뿐만 아니라 부당 징계 역시 계속돼 2012년 이후 84명에 이른다.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일단 징계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경영진에겐 법보다 국정원 문건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비어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며 MBC를 움직여왔던 검은 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에 잘 보여 알량한 임원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자기 손에 동료들의 퍼즐 문히길 주저하지 않았던 경영진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MBC 노조 녹화 사업' 실제로 진행됐다

'건전 성향 노조위원장 당선을 측면 지원하고...'. 2010년 2월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다. 2011년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던 당시 이근행 노조위원장 후임으로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조위원장을 당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 아예 '어용 노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입안됐던 것이다.

'노조위원장 당선 공작'은 실패

하지만 이 공작은 실패했다. 정영하 전 위원장이 이근행 집행부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인 2010년 10월부터 노조위원장 후보로 이미 확정됐고 88.3%의 투표율, 94.6%의 찬성률이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 전 위원장은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맞서 2012년 170일 파업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해고돼 아직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내부 조력자들은 87년 이후 오직 공

정방송을 위해 싸워 온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저력, 그리고 각종 노조 탄압에도 흔들림 없던 조합원들의 강고한 대오를 과소평가했던 셈이다.

"공정방송노조 활용" 계획도 지지부진

국정원은 또 세부 계획 중 하나로 '공정방송노조(당시 선임자노조) 활용'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좌파정부시절 비리의혹 및 노조 배후 인물들의 부도덕성 등 내부비리 폭로 독려,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정방송노조는 이미 2009년 2월 "MBC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며 사과 기자회견을 벌인 전력이 있다. "공영보다 민영이 낫다는 의견도 우세하다"며 민영화를 부추기기도 했다. 공정방송노조를 활용하려던 이 계획은 그러나, '노조위원장 당선 공작'과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한때 부장급 이상 간부 1

백여 명이었던 공정방송노조 조합원은 현재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의 '제3 노조'

이런 와중에 2013년 3월 김세의, 최대현, 박상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3노조가 출범한다. 이들은 노조 간부이면서도 사측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김세의의 '리포트 녹취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국은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방문진 구여권 이사장이 감사 결과 제출을 앞장서 막았다. 최대현 역시 지난 대선 하루 전날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클로징 멘트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뉴스 앵커를 맡고 있다. 2012년 경력 기자로 입사한 박상규는 입사 4년만인 지난해 런던 특파원으로 선발돼 현지 근무 중이다. 실패로 끝난 국정원 발 '노조 장악 시도'가 제3노조 설립과 지원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BC 장악 최종 단계는 ‘민영화’

국정원 ‘MBC 장악’의 마지막 3단계는 ‘MBC 민영화’다. 국정원 문건엔 ‘MBC의 소유 구조를 개편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적시해 놨다. MBC 지배구조와 공영방송의 성격을 완전히 엮어버리겠다는 이 무도한 민영화 기획은, 실제로 문건 작성 이후 줄기차게 시도됐다.

김재철의 ‘민영화’ 집착

김재철 전 사장은 2012년 7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민영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발언했고, 같은 시기 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당시에는 김 전 사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사퇴 압력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재철의 민영화 발언은 사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영화 <공범자들>에서는 공영방송 파괴의 책임을 묻는 최승호PD에게 “MBC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내놓았고, 지난 5일에는 부당노동 행위를 조사받으러 출석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MBC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미 사장에서 물러난 사람이 이토록 민영화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는 이유를 이 때만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도 국정원 기획?



MBC 민영화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2년 170일 파업 직후, 당시 기획홍보본부장이던 이진숙은 은밀하게 민영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대기업과 중편 출신 일부 직원을 중심으로 민영화 추진 TF팀을 꾸리기도 했다. 2012년 10월엔 정수장학회를 찾아가 故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회

동을 가졌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를 2013년 상반기에 상장하고, 매각 대금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에 쓰겠다는 꽤 구체적인 계획까지 오고갔다. 당시는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른바 ‘유신 장물’인 정수장학회와의 연관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이 때문에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이 박근혜 후보를 도우려는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주로 제기됐었다.

정권의 큰 그림 ‘MBC 민영방송’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민영화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다. 국정원은 ‘3단계 민영화’를 MBC 장악의 완성이라고 본 듯하다. 김재철 전 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MBC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민영화 시키겠다는 대범한 계획을 세웠다. 김재철과 이진숙은 이 계획의 조력자 역할을 집요하고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제 국정원은 물론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다.

내통자와 실행자도 수사하라!

내통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원이 단독으로 만든 ‘MBC 장악 문건’이라기엔 너무도 상세하고 적나라하다. 선거방송기획단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극렬 노조원’이라고 분류하는가 하면, 노조와 사측의 단협 조항까지 파악하고 있고, 심지어 라디오 작가의 이름까지 교체 대상 인사로 등장시킨다.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도 지나치게 세세하다. 정일윤 당시 진주 MBC 사장에 대해 국정원은 ‘노무현 조문을 부추기고 미디어법 파업을 독려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지역사 사장으로서 서울에서 출장은 취재진을 격려한 걸 ‘조문을 부추겼다’고 본 것인데, 내통자가 없었다면 이 정도 일까지 국정원이 알기는 힘들다. ‘김정수 전 원주

MBC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반대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도 마찬가지다.

내통자와 더불어 국정원 지침에 대한 ‘실행자’들도 분명히 있다. 국정원 MBC 장악 문건의 1단계 인사 학살과 2단계 노조 말살은 상당 부분이 국정원 지침대로 실제 MBC 내부자들에 의해 실행됐다. 국정원의 지시대로 사측은 단협을 해지했고, 일선 기자와 PD들을 몰같이 했다. 물같이 할 기자 PD들을 뽑을 때 ‘국가관’을 첫 번째 채용 기준으로 삼고, 실제 채용 면접에서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세월호 천막은 언제 치우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국정원 문건과 지침은 현재 MBC에서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지금도 국정원 실행자들이 MBC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다.

MBC를 정권에 갖다 바친 이들 내통자와 실행자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들 내통자와 실행자들도 전대미문의 공영방송 파괴에 가담한 공범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조합엔 당시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이 잦았다는 인물들에 대한 증언과 제보들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정원 직원들과 자주 만난다’는 걸 자랑삼아 주변인들에게 얘기하는 사측 인사도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MBC 파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측의 '황당' 특보... "팩트를 알려주마"

사측은 지난 15일 <MBC특보>에서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주장들을 늘어냈다. 특정 아나운서들의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저열한 인격모독을 가했고, 이를 본 아나운서 조합원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동시에 토로했다. 일단 <MBC특보>는 그들이 만드는 뉴스처럼 팩트부터 틀린, '거짓 특보'다.

이재은, 뉴스 진행 안했다?



이재은 아나운서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토요일 낮 뉴스를 진행했다. 비중이 큰 뉴스가 아니면 뉴스가 아닌가? 또 지난 달 22일 MBC 아나운서들의 '제작거부 선언' 기자회견은 이재은 아나운서 개인의 단독 회견이 아니었다. 그 동안 피해를 받은 MBC 아나운서 전체의 기자회견이었다. 회사는 특정 아나운서가 나와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만의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재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MBC특보는 특보를 쓴 사측인사 개인의 주장이란 말인가?

김소영, 활기가 떨어져 교체?



사측은 MBC특보에서 김소영 아나운서에 대해 "복면가왕 출연 인기 등 다재다능함을 활용해 아침 뉴스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스스로 김소영 아나운서가 다재다능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측도 인정한 다재다능한 아나운서는 10개월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됐고, 결국 회사를 떠나고 말았다. 김소영 아나운서는 앞서 평일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MBC의 가장 중심이 되는 뉴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김소영 아나운서가 톤이 낮고 차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데스크와 뉴스24를 진행할 때는 사측이 몰랐다는 것인가? 사측이 밝힌 하차 이유가 겨우 '톤이 낮고 피곤해 보여서'라니 실소가 터져 나온다.

박연경, 앵커 맡은 지 두 달?



박연경 아나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를 진행했다. 앵커를 맡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 관계가 아예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혹시 사측은 뉴스데스크만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회사 특보를 발행한 당신들이 다시 한 번 부끄럽다. 뉴스 앵커를 단 하루를 하든 1년을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단 하나의 앵커 멘트를 처리 하더라도 저급한 뉴스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편파적인 리포트에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앵커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작가와 리포터의 진심을 모욕하지 말라!

“ (노조애들) 너무 믿지마. 000같은 애들은 불쌍하게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싸움은 자리 싸움이야.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할 사람은 많고...현실 파악을 잘 하소.”

협박이다. 알량한 권력을 손에 쥔 언론부역자의 비열한 협박이자 명백한 갑질이다. 파업 직전 한 라디오 작가가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문자를 받고 신변의 위협과 함께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자를 회람한 다른 라디오 작가들도 심한 모욕감을 느껴 프로그램 차를 결정했다.

저들이 말하는 자리 싸움과 현실 파악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가. 만천하에 공개된 국정원의 사주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 공범자들. 그들



은 사욕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왔던 자신들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라디오 작가와 리포터들의 진심을 폄훼했다.

사측이 지난 15일 발간한 MBC특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등장한다.

“회사 비방하고 매도할 수만 있다면 PD와 기자들이 참여한 언론노조 파업에 힘없는 파견 작가와 AD에 라디오 리포터까지 동원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 인지, '갑질'이 아닌

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들에게 저열한 갑질을 하고 있는 자, 누구인가. 힘없는 약자들에게 겁박을 일삼고 있는 자, 누구인가.

70명의 라디오 작가와 12명의 리포터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들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자신들의 진심을 담아 자존심을 표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라디오 PD들조차 성명서가 발표된 뒤에야 이를 알았을 정도다. 대체 누가 누구를 동원하고, 어떤 갑질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번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자리 싸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현실 파악이 끝나서도 아니다. 우리는 공정방송을 지지했던 작가와 리포터들을 지켜낼 것이다. 용기를 낸 그들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갈 것이다.



김원배보다 황당한 MBC 뉴스

지난 17일 오전 10시 반, 대전의 한 교회 앞.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전 지부 조합원 10여 명이 집결했다. 해당 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다니는 곳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김 이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교회 앞 집회 현장에는 김 이사 대신 영동하게도 MBC 취재 기자 1명과 영상취재PD 2명이 나타났다.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주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취재인력을 3명이나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10여 명이 모인 집회에 관심을 보이는 건 극히 드물다. 현장에서 취재진의 신분을 물었지만 답하지도 않았다. 뉴스가 나간 뒤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연상 기자의 공로를 치하하기까지 했다. “김 이사가 악마들에 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도 잊지 않았다.

1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전과를 통해 시

청자들에게 전해졌다. 보도 자체도 이상하지만, 내용은 더 심각했다. 집회 주최측의 주장은 없고 집회로 인한 피해만 부각시켰다. 백연상 기사는 리포트에서 해당 교회 관계자 2명과 김 이사 등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예배 장소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4.9%라는 저조한 시청률로 해당 리포트를 본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전과 낭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상파 뉴스를 MBC 이사진과 경영진의 이해만을 위한 ‘나팔수’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뉴스 사유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박건식 조합원(PD)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리포트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PD는 리포트에 상대 당사자인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방송심의규정 9조 2항(대립되는 사안의 공정성), 4항(자사이기주의 방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회 앞 공용도로를 예배당인 것처럼 왜곡했는

데 이는 방송심의규정 9조 1항(공정성)과 14항(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커서는 ‘친박’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계룡미래포럼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목원대 총장 시절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이런 김 이사가, 자신의 전공인 ‘무역’ 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MBC 방문진 이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영주 김광동 일당과 함께 ‘구여권 거수기’ 그룹에 속해 MBC를 망가트린 김장겸 ‘사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처신이다. 그래서 공영방송 역사에 남을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자진 사퇴’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지금의 MBC 부역자 뉴스는 깡그리 무시했다.

함량미달 낙하산, 심원택은 물러가라



여수MBC 간부들, 회식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동석시켜

지난 5일, 여수MBC 보도제작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신입사원과 상무 간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상무가 떠난 뒤에도 술자리는 노래방까지 이어졌고, 술에 취한 보직자들은 흥에 겨워 춤까지 쳤다. 여수지부 전체 조합원이 바닥까지 추락한 MBC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체 출정식을 갖고 공정방송 쟁취 의지를 천명한 그 날, 보직자들은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인 것이다.

몰상식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도제작국장은 프리랜서 신분의 여성 아나운서 두 명을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리였음은 자명하다.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파업에 동참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을 그들에게 간부들은 술잔과 노래방 마이크를 건넸다. 약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습 ‘갑질’이었다. 상식과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였다.

심원택, ‘신체 접촉이라도 있었나? 뭐가 문제야?’

조합은 상식적인 선에서 회사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심원택 여수MBC 사장의 적반하장식 망언뿐이었다. 심원택은 간부의 요청으로 두 명의 아나운서가

동석한 사실에 대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조합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상식과 염치를 내팽개친 것인지, 아니면 애초 인간 됨됨이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지역MBC 사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심원택과 보직간부들은 조합의 지적에 대해 수준 이하의 궤변으로 점철된 성명을 늘어놓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세월호를 뭐하러 인양해?’... 언론 부역자의 민낯을 드러내다

심원택이 누구인가? 부패 정권에 부역했던 대가로 지역 MBC 사장에 낙점된 대표적인 낙하산으로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장본인이다. 여수MBC 사장에 부임한 뒤에도 ‘그 많은 돈을 들여 세월호를 왜 인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두환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발언을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꺼내며 자신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심원택이 함량미달의 낙하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또,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부끄럼도 없는 부역자에게 지역MBC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심원택 등 뒤에 숨은 간부들도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청산돼야 할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심원택과 간부들은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들 앞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